

유럽의 1인 가구 관련 정책 동향: 영국, 프랑스, 스웨덴을 중심으로

Policy Trends on One-Person Household in European Countries

이명진(고려대학교 사회학과 교수)

1인 가구 비율이 높은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관한 검토를 통해 우리는 두 가지 측면을 주목해야 한다. 첫째,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출발점이나 바탕에는 보편적인 개인에 대한 시민권 보장이 있다. 따라서 1인 가구만을 위한 특별한 지원 체계가 존재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 다만 1인 가구의 사회경제적 지위가 취약할 가능성이 크기 때문에, 이들이 각종 사회복지 정책의 지원 대상자에 포함될 경우가 많다. 둘째, 유럽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단기적으로 도입할 수 있는 내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 보편적인 복지제도가 갖춰지지 못한 사회에서는 1인 가구 관련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화된 정책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특히 1인 가구의 급증으로 인한 사회적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 국가에서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중요한 방향으로 삼고 있는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기 위한 각종 정책과 프로그램을 적극적으로 고려해야 한다.

1. 들어가며

최근 현대 사회의 핵심적인 화두로 단절, 고립, 분열의 문제가 대두됨에 따라 통합, 연계, 공생의 방법을 찾기 위한 사회적인 노력과 관심이 증대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개인의 고립 및 단절과 관계가 깊은 대표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상황에 대한 전 지구적 관심이 퍼지고 있다는 점은 2007년 다보스 세계 경제 포럼에서 신조어로 ‘독신 경제(single economy)’가 중요하게 다루어진 사실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물론 이러한 관심은 기본적으로 독신 가구의 소비와 구매력에 관한 관심에 집중되어 있지만, 그 사회적 파급효과나 정책적 함의도 크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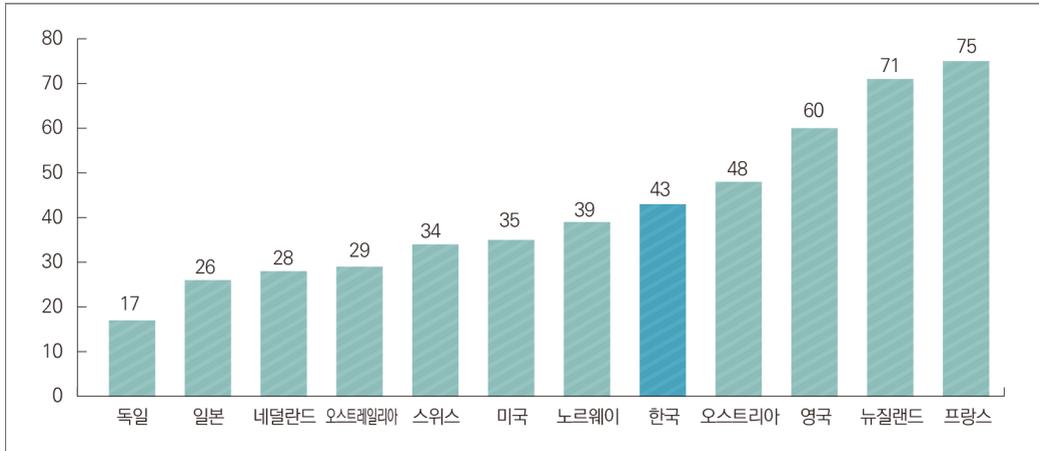
이미 세계적으로 1인 가구의 비중은 주목할 만큼 높아졌다. 유엔 자료에 따르면 2017년 현재 100가구 가운데 약 15가구가 1인 가구로 추정된다. 이 비율은 국가별로 다소 다른데, 대체로 선진국에서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지역은 유럽이다. 유럽 국가 중에서 독일, 덴마크, 노르웨이, 핀란드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40%를 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다음으로 영국(38%), 스웨덴(38%), 오스트리아(37%), 스위스(37%), 네덜란드(36%), 프랑스(35%), 이탈리아(33%) 등이 높은 1인 가구의 비율을 보이는 국가이다. 유럽 이외 지역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나라는 일본(32%), 미국(28%), 캐나다(28%), 한국(27%), 오스트레일리아(24%), 뉴질랜드(24%) 등이 있다(UN, 2017).

개별 국가 내에서는 대도시에서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일본의 예를 보면 장기 불황에 따른 비자발적 1인 가구가 증가함에 따라 도쿄 같은 대도시의 1인 가구 비율이 45%에 육박하는 상황이다. 한국의 서울도 유사한 유형을 보이며, 중국의 베이징이나 상하이에서도 최근 1인 가구의 증가가 가시화되고 있다(Cheung & Yeung, 2015; 서울특별시, 2018;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19).

아울러 이러한 경향은 더욱 가속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그림 1]에 제시된 것처럼 OECD(2011)의 예측 자료에 의하면 2025~2030년 사이에 한국의 1인 가구는 43% 더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다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가들도 높은 증가율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데, 프랑스(75%), 뉴질랜드(71%), 영국(60%), 오스트레일리아(48%), 노르웨이(39%), 미국(35%)의 증가율이 높을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1인 가구의 급증은 단순한 가구 구성의 변화를 넘어 사회적 함의를 가지고 있다. 1인 가구의 급증은 개인의 '개인화'와 '개별화'를 촉진하고 사회 내에서 인간관계의 고립과 단절을 불러일으킨다. 이러한 현상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의 가치를 위협한다는 점에서 현대 사회의 핵심 문제이다(Giddens, 1991). 개인화를 넘어 개인 사이의 유기적 의존 관계가 심각하게 해체되거나 구성원 사이에 적대적 관계가 증폭되는 상황으로도 발전할 수 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사회 성원들을 사회, 단체, 공동체로 결합하는 사회적 응집력이 감소하다 보면 가치와 규범이 통일되지 못하고 사회 해체의 위기가 발생할 수도 있다.

그림 1. 주요 OECD 국가의 1인 가구 증가 비율 예측(2025-2030년)



자료: OECD. (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그런데 개인주의화의 흐름이 사회 통합을 위협하는 이면에는 기존에 사회를 지탱하는 기반이 되어 온 세 개의 주요 영역인 가족과 시장, 국가의 비중과 역할이 전면적으로 재구조화되고 있는 현실이 자리한다. 과거 개인의 사회 통합에서 가장 근본적인 매개 역할을 수행했던 것이 가족 중심의 공동체적 연대였다면, 현재 우리의 가족은 단기간에 이루어진 압축적인 산업화와 도시화를 거치며 형태가 급격히 다양화되는 구조적 재편과 규모 축소, 전통적인 기능 약화 등의 총체적 변화를 경험하고 있다. 가족의 약화가 오늘날 현대 사회에서 가족주의에 바탕을 둔 사회적 공감대 와해, 상호 의사소통의 저해에서 오는 비효율성과 사회적 불안감, 이를 완화하기 위한 사회적 비용 증가 등 광범위한 문제를 일으키는 잠재적 위험 인자가 될 수 있다.

가족 영역의 축소와 함께 사회 전반에서 진행 중인 시장주의의 팽배로 인해 공동체적 관계가 상품 관계로 대체되고, 시장이 가족의 기능과 영역을 압도하고 있다. 이로 인해 사회 통합에서 제3의 주체인 국가의 균형추 구실이 한층 폭넓게 요구되는 상황이 전개되고 있다. 가족과 시장 간 제도적 불균형이 심화하는 가운데 근대적 사회 질서의 보편적 담지자인 국가가 개인과 공공의 복리에 대한 기능을 확대하고 개인이 사회와 연계되는 또 하나의 통로 역할을 적극적으로 강화해 나가야 할 중대한 책무를 져야 하는 것이다. 1인 가구가 점차 전형적인 가구가 되고 있다는 최근 정부 통계는 가족의 축소와 그로 인한 시장 기능의 확대, 적극적인 정

책적 개입을 요구받고 있는 국가의 세 영역이 맞물려 있는 바로 그 교차점에 1인 가구 현상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 준다.

이 글에서는 이러한 사회적 함의가 있는 1인 가구 급증에 대한 사회적 대응, 특히 유럽 국가의 정책에 관해 살펴보고자 한다.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비교적 높은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정책을 중심으로 살펴봄으로써 앞으로 한국에서 1인 가구 정책의 가능성을 검토하는 데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2. 유럽의 1인 가구 현황과 관련 정책

1인 가구는 이미 2018년에 유럽, 특히 유럽연합(EU) 지역에서 가장 일반적인 가구 유형이 되었다. 2010년 전체 EU 지역의 1인 가구 비율이 31%였고,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2017년 34%에 이르렀다(European Commission, 2019). 물론 그 내용을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국가별로 차이가 크게 난다. 1인 가구의 비율이 스칸디나비아 국가나 독일의 경우처럼 40% 내외인 나라가 있는가 하면, 지중해 국가나 동유럽 국가들에서는 1인 가구의 비율이 25% 미만인 경우가 많다. 그리고 증가 비율이 상대적으로 큰 국가가 있는가 하면 1990년대 이후 큰 변화가 없는 국가도 있다. 중요한 사실은 유럽에서 1인 가구 증가는 되돌릴 수 없는 추세라는 것이다.

이러한 유럽의 1인 가구 비율은 여러 가지 요인과 연관되어 있다. 노동시장, 교육제도, 복지제도 등 사회경제적인 구조적 요인이 중요하다. 아울러 산업혁명의 시기와 유형으로 인한 도시 환경의 차이도 1인 가구 비율에 영향을 미쳤다. 그리고 문화적인 요인도 큰 영향을 끼쳤다. 이러한 개인의 독립된 삶을 강조하는 문화적인 환경은 홀로 살고자 하는 개인의 선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홀로 사는 것’에 대한 긍정적인 평가가 존재하는 국가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다. 반면에 가족주의적 전통이 강한 국가에서는 1인 가구 비율이 상대적으로 낮다. 1인 가구에 대한 사회 정책도 이러한 문화적 특성을 반영하고 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유럽 국가, 특히 1인 가구의 비율이 상대적으로 높은 국가의 경우 사회보장제도가 비교적 잘 갖추어져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인 가구에 국한한 특정한 정책을 시행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다만 많은 경우 개별 시민에 대한 일정 수준의 삶의 질을 보장하기 위한 기존의 사회복지제도를 시행하면서 경제적으로 취약한 1인 가구를 보편적 사

회복지제도의 대상으로 삼을 가능성이 크다. 아울러 1인가구가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주택 공급이나 주거비 지원, 사회적 고립을 완화하기 위한 특별 정책 등을 추가로 시행하고 있다.

가. 영국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은 크게 영국 내 1인 가구의 네 가지 특징을 기반으로 한다. 첫 번째 특징은 여성 노년 가구가 1인 가구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을 차지한다는 것이다. 두 번째 특징은 가장 급증하는 연령대가 25~44세라는 점이다. 세 번째 특징은 최근 남성 청년 1인 가구 비율이 급증한다는 것이다. 마지막으로 남성의 경우 1인 가구가 일시적인 가구 유형이라기보다는 지속적인 가구 유형이 되고 있다는 것이다(Bennett & Dixon, 2006).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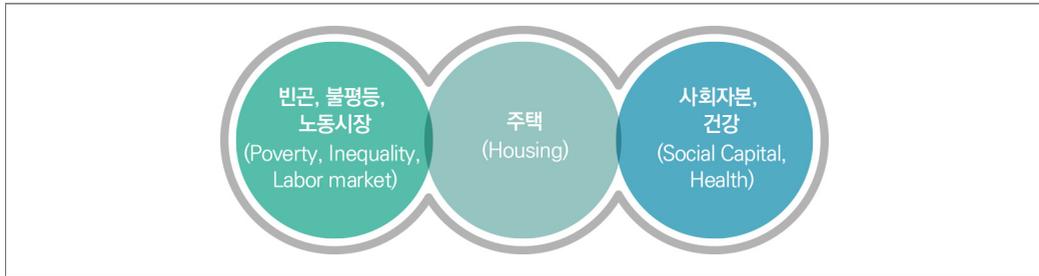
공식적으로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방향이 제시된 것은 없다. 하지만 계획되고 있거나 시행되고 있는 관련 정책을 고려해 볼 때 대체로 세 가지 방향으로 구분해 볼 수 있다(그림 2).

첫 번째 방향은 빈곤, 불평등, 노동시장 관련 정책과 관련이 깊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빈곤과 불평등이 증가할 것으로 예측된다. 이러한 빈곤과 불평등의 문제는 여러 가지 여건으로 인해 비자발적 혹은 강요된(forced) 1인 가구의 경우 더욱 심각하다. 노동시장에서 상대적으로 취약한 위치로 인해 1인 가구가 된 경우 빈곤이 더욱 악화될 수 있다. 게다가 일반적으로 1인 가구의 생활비가 다인 가구의 1인당 생활비보다 좀 더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두 번째 방향은 주택 정책과 관련이 크다. 1인 가구의 증가에 따라 다양하고 유연한 주택 정책이 도입되고 있다. 1인 가구의 경우 여러 가지 이유로 주택 구매 욕구와 주택 구매력이 상대적으로 작다. 전체적으로 주택 구매력이 낮아짐에 따라 전반적인 주택 수요와 공급 정책에 대한 변화가 필요해지고 있다. 아울러 기존 공공임대주택(social housing 혹은 council housing) 정책의 변화가 필요하다. 1인 가구의 경우 저소득 가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주택복지 정책의 혜택에서 배제될 가능성이 크다.

세 번째 방향은 사회자본과 건강 정책이다. 1인 가구의 증가는 개인의 고립 상황을 악화시키고 신체 건강과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줄 수 있다. 친구나 가족으로부터 고립된 사람일수록 음주나 흡연 같은 건강 위해 행동(health risk behavior)을 더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주거 상황이 열악함에 따라 각종 범죄에 노출될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이에 대응하기 위하여

그림 2.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방향



자료: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재구성.

지역사회에서 자원봉사 같은 자발적 참여를 통해 사회자본과 생활 안전 수준을 높이는 각종 정책이 계획되고 있다.

이러한 방향성에 기반하여 실제로 진행되고 있는 정책 중 주택 정책이 대표적이다. 영국의 1인 가구 관련 주택 정책의 가장 대표적인 정책이 공공임대주택이다. 이 주택 유형은 저소득층 주거 안정을 위해 지자체 등이 직접 임대주택을 공급하거나 임대료를 통제하는 것이다. 두 번째 관련 정책은 25세 이하 청년층에 대한 주거 지원 정책이다. 학교 등 청년 1인 가구의 주거 수요가 높은 지역에서 주택 임대를 지원하는 정책이다. 세 번째 관련 정책은 싱글룸 대여 정책이다. 16세부터 25세 이하의 청년층이 공동 거주형 숙소 내의 개인 침실을 임차할 수 있다. 네 번째 관련 정책은 공동체 주도 주택 정책이다. 특별한 나이 제한은 없으나 1인 가구의 수요에 부합하는 코하우징, 협동조합주택, 공동체 토지 신탁, 공동체 자가건설주택, 자조주택 정책 등 다양한 방식이 여기에 해당한다. 다섯 번째로는 60세 이상 1인 가구 노인을 대상으로 하는 보호주택(sheltered housing) 정책이 있다. 물론 노년 부부도 이 유형의 주택에 지원할 수 있다. 이러한 유형의 주택에서는 요양원과 달리 최소한의 보호와 지원이 제공된다. 이 주택에는 공동 라운지와 세탁실 등이 갖추어져 있다. 아울러 다양한 형태의 행사를 통해 지역사회 내 유대를 유지하는 데 도움을 준다(이석환, 최조순, 2015; Scanlon & Arrigoitia, 2015; GOV.UK, 2019).

나. 프랑스

프랑스의 1인 가구 비율은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2011년에 전체 가구 중 약 33%를 차지

하였고 2017년에는 35%로 상승하였다. 프랑스에도 1인 가구 관련 단일 정책이 존재하지 않는다. 다만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주택 정책에서 가구원별 범주를 중요한 기준으로 삼고 주택수당 지급 기준을 경제적 상황과 연계하기 때문에 1인 가구가 주요 수혜자라고 볼 수 있다(김윤영, 2017).

이를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수입이나 자산이 일정 규모 이하인 청년 1인 가구에 대해서는 주택수당을 제공한다. 그리고 학생에게는 임대 보증금을 지원한다. 국적과 상관없이 청년이 정부와 협약을 맺은 임대아파트, 학교 기숙사나 민간 기숙사에 입주하게 될 경우 개인주택수당(APL: Aide Personnalisée au Logement)을 제공한다. APL을 받게 되면 그만큼 월세나 대출금이 줄게 된다. 다른 유형의 주택에 입주하는 경우 사회주택수당(ALS: 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받게 된다. 1인 가구가 아니지만 앞서 두 개 유형의 주택수당을 받지 못할 경우 가족주택수당(ALS: l'Allocation de Logement Sociale)을 신청할 수 있다. 마지막으로 학생을 위한 임대 보증금 지원 제도(CLE)는 임대 보증금을 지급하기 어려운 학생을 대상으로 정부가 보증하는 제도이다. 28세 미만이고 일정한 수입이 있는 학생은 이 보증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 가족이나 제삼자의 보증은 필요 없다. 박사 학위가 있는 28세 이상의 외국인도 이 보증제도에 지원할 수 있다(European Youth Portal, 2019).

한편 노년 1인 가구에 대한 정책은 노년 인구에 대한 전반적인 정책에 포함되어 있다. 다만 1인 가구 비율이 높다는 점에서 노년 인구 문제를 살펴봐도 큰 문제가 없을 것이다. 프랑스에서 노년 인구에 대한 정책은 크게 네 가지 차원으로 나뉘 볼 수 있다(표 1).

첫 번째 차원은 주거 문제이다. 그런데 노인도 청년 1인 가구와 마찬가지로 일정 자격을 갖추면 주택수당을 신청할 수 있다.

두 번째 차원은 노년 빈곤 문제이다. 예를 들면 2013년부터 2017년까지 빈곤과의 전쟁과 포용 정책(The Five-Year Plan of the Fight against Poverty and for Social Inclusion)을 통해 사회보장의 최소 기준을 높이고 건강 지원의 편이성을 향상시켰다. 노인의 경우는 다양한 지원 제도를 이용할 수 있다. 간병·간호 지원 제도(APA: allocation personnalisée d'autonomie)는 독립적으로 생활하기 어려운 노인에게 간병 혹은 간호를 제공한다. 가정도우미제도와 노인연대수당(solidarity grant for elderly people)은 65세 이상 노인 중 장기요양보험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인이나 노령연금을 받지 못하는 노인 빈곤층에 제공되는 수당이다.

표 1. 프랑스 노년 정책의 차원과 관련 정책

차원	정책
빈곤	노인연대수당
고립과 정신 건강	노인을 위한 활동과 모임 활성화
주거	각종 주택수당
이민자	은퇴 이민자 수당, 주거 지원

자료: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 Report on the French Ageing Policy에서 재구성.

세 번째 차원은 노년 인구의 고립 문제이다. 많은 노인이 고립감과 우울감으로 인해 정신 건강을 해치게 된다. 노년 인구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활동과 모임은 비슷한 연령대 사람들을 만날 수 있게 해 준다. 아울러 다른 세대 사람들을 만날 기회를 늘릴 수 있다. 이러한 맥락에서 사회적으로 고립된 노년 1인 가구의 사회적 유대와 활동을 위해 각종 기관과 협회로 구성된 모나리자(MONALISA: MOBilisation NAtionale contre l'Isolément Social des Agé)가 2013년부터 활동하고 있다(김윤영, 2017).

네 번째 차원은 노년 이민자 문제이다. 이 문제는 프랑스의 특수 상황과 관련이 있다. 노년 이민자들은 대부분 프랑스 사회에서 오랜 기간 일하고 살아왔음에도 불구하고 프랑스 주류 사회로부터 고립되어 있다. 심지어 고국으로 귀국한 이민자들도 고국의 가족들로부터 고립되어 있는 경우가 많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프랑스 정부는 최대 매달 550유로를 노년 이민자에게 지급하고 있다. 아울러 프랑스 아도마(Adoma) 같은 공공 기업은 60세 이상이고 1960년대 프랑스로 와서 계속 거주하는 노년 이민자에게 주거를 제공하거나 노년층의 필요에 맞추어 주거 환경을 개선하고, 노년 이민자의 개별 상황에 맞는 지원 제도를 시행하고 있다(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

다. 스웨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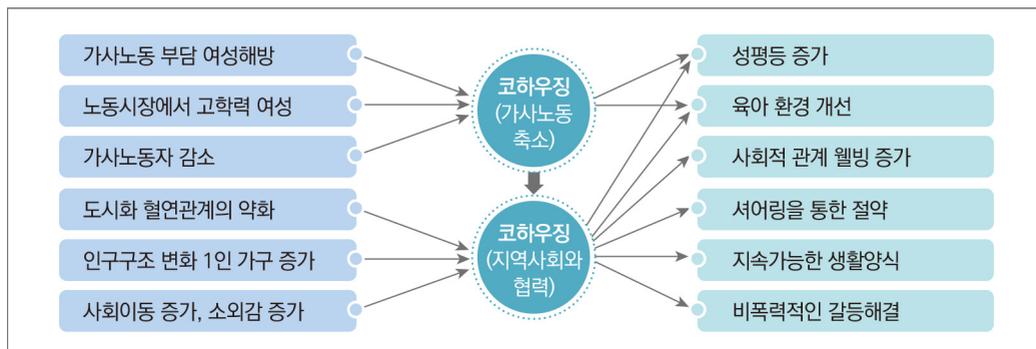
스웨덴에서도 영국이나 프랑스와 마찬가지로 1인 가구 관련 정책이 개별 정책이라기보다는 각종 복지제도에 포함되어 있다. 1인 가구 관련 정책에 초점을 맞추자면 사회부조(social welfare allowance)와 주택수당(housing allowance)이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물론 여기에서 다양한 복지제도가 기초적인 안전장치로 작동한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무엇보다도 일정 수준의 수입이 있는 18~24세 청년 세대를 위해 최대 1300크로나가량의 주거비용이 제공된다. 사회부조

수급자에게 월세가 지원되며, 연금 수급자나 장애인을 위한 보조 주택수당이 제공된다 (OECD, 2018; European Commission, 2019).

협동주택(cooperative house) 혹은 집합주택(collective house) 같은 코하우징은 사회복지제도를 넘어선 1인 가구를 위한 주요 지원책이다. 코하우징을 통해 1인 가구의 주거비용을 줄이고 사회 참여를 활성화하고자 한다. 스웨덴에서 코하우징의 역사는 1930년대로 거슬러 올라간다. 사실 코하우징의 시초는 출산과 육아 등 여성의 어려움을 도와주하려는 노력에서 시작되었다. 전통적인 가족에 기반을 둔 돌봄 기능을 대체하려는 시도였기 때문에 주로 중산층 이상 고학력자 부부를 대상으로 운영되었다. 실제로 코하우징 입주자들은 공동체를 위한 활동이나 일을 통해 참여하기보다는 가사노동 등으로부터 자유로워지기 위해 이러한 주거 형태를 선택하였다(Vestbro & Horelli, 2012; Vestbro, 2014).

이러한 코하우징 형태는 1970년대 이후 대도시를 중심으로 청년 1인 가구의 급증에 따라 변화하게 되었다. 공공 부문에서 개인의 프라이버시를 보장하되 주거 유지비를 낮춘 대량의 주택을 공급해야 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스톡홀름 남부 지역의 프레스트고르드샤겐(Prästgårdshagen)이 대표적인 예이다. 이 코하우징에서 입주민들은 공동 건물의 관리와 운영에 의무적으로 참여하였다. 주택 유지 비용을 절약하고 공동체 내에서 사회적 유대를 유지할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코하우징 모형은 좀 더 발전하여 스톡플튀크칸(Stolplyckan)이라는 코하우징 유형으로 나타났다. 노년층과 장애인을 포함하여 입주자의 구성을 다양하게 하였을 뿐만 아

그림 3. 스웨덴 코하우징 모형의 원인과 효과



자료: Vestbro, D. U. (2014). Cohousing in Swede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www.kollektivhus.nu/pdf/SwedishCohousing14.pdf>

나라 유아원, 체육관, 공동 식당 등 공동 공간도 다양하게 구성하였다. 입주민 스스로 각종 공동체 행사와 건물 유지 작업에 참여하게 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다양화와 협력 모형이 사회 혼합(social mixing) 이론과 달리 효율적으로 작동하지 않았다. 세대 사이의 기대와 역할 사이에 큰 차이가 존재하였기 때문이다.

최근의 코하우징 유형은 인생 후반기(second half of life) 모형이다. 예를 들면 스톡홀름 페르드 크네펜(Färdknäppen)은 공동체 삶을 원하는 40세 이상의 중년과 노년 거주자를 위한 시설이다. 1993년에 건설된 건물은 총 7층 규모로, 총 43개 아파트를 포함하고 있다. 개별 시설로는 침실과 거실 그리고 간단한 주방이 있다. 공동 시설로는 도서관·컴퓨터실·세탁실, 취미 공간, 목공실, 체육관, 사우나는 물론 외부 방문객을 위한 침실도 있다. 거주민들은 건축물 설계 때부터 참여하였는데, 코하우징의 유지와 관리 활동까지 이어지고 있다. 각종 1인 가구가 상대적으로 많은 저소득층 가구가 이러한 주거 환경을 누리려면 국가의 주택보조금은 필수적이다(Vestbo & Horelli, 2012).

3. 나가며

유럽의 주요 국가인 영국, 프랑스, 스웨덴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을 살펴보았다. 이러한 국가의 1인가구 관련 정책을 검토하면서 우리가 주목해야 몇 가지 측면이 있다.

첫째, 이들 국가의 1인 가구 관련 정책의 바탕이나 여건이 한국 사회와는 다소 차이가 있다는 것이다. 이들 국가는 1인 가구의 비율이 40% 전후로 높다. 그리고 사회복지제도가 잘 갖추어진 나라이다. 그만큼 1인 가구 관련 정책 자체보다는 보편적인 사회복지제도를 통해 개인의 시민권을 보호하고 다양한 유형의 배제를 최소화하여 사회 통합을 지향하는 측면이 크다. 1인 가구에 더욱 특화된 주택 정책 역시 보편적인 시민권을 보장하고자 하는 목적이 강하다(홍승아, 성민정, 최진희, 김진욱, 김수진, 2017). 그렇다면 한국 사회에서 1인 가구 정책을 검토할 때에는 중장기적으로 보편적인 시민권 보장이라는 큰 방향도 고려해야 한다. 동시에 현재의 문제에 대처하기 위한 특별한 정책도 생각할 필요가 있다.

둘째, 유럽의 사례가 우리의 현실과 다소 차이가 있더라도 그 방향이나 취지를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 1인 가구의 문제는 복합적이고 중층적이다. 교육, 일자리, 고령화, 빈곤, 안전 등 다양한 사회문제에 걸쳐 있다. 게다가 세대, 성별로 각 문제의 중요성에서 차이

가 난다. 이들의 사회경제적 상황도 다양하다. 그럼에도 다양한 1인 가구의 공통적인 특징은 사회적 고립이라는 사실을 중요하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다(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사회적인 고립은 개인적인 수준의 건강과 삶의 질이라는 문제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수준에서 연대, 신뢰를 약화시키고 사회 갈등을 증폭시킬 위험이 있다. 유럽의 국가들이 1인 가구 정책과 관련해 여러 계층과 세대 사이의 사회적인 연대와 네트워크를 활성화하고 각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노력하는 데 주목해야 한다. 다만 사회 혼합을 지향하는 이론의 이상적인 목표와 달리 현실에서 유대와 상호작용이 실제로 작동하기 어려운 여러 요인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인구사회경제적 배경이 다른 개인 사이에 협동과 유대를 형성하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게다가 계층, 세대, 성별 사이에 존재하는 수직적 차이가 큰 한국 사회에서는 더욱 그러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윤영. (2017). 1인 가구를 위한 정책 방향 연구. 인천: 인천발전연구원.
- 서울특별시. (2018). 2018 서울서베이 도시정책지표조사.
- 이명진, 최유정, 이상수. (2014). 1인 가구의 현황과 사회적 함의에 관한 탐색적 연구. *사회과학연구*, 27(1), 229-253.
- 이석환, 최조순. (2015). 경기도 1인 가구 특성 분석 연구. 경기: 경기복지재단.
- 홍승아, 성민정, 최진희, 김진욱, 김수진. (2017). 1인 가구 증가에 따른 가족정책 대응방안 연구. 서울: 한국여성정책연구원.
- Bennett, J., & Dixon, M. (2006). *Single Person Households and Social Policy: Looking Forwards*. Joseph Rowntree Foundation.
- Chen, J. (2006). *The Dynamics of Housing Allowance Claims in Sweden: A discrete-time hazard analysis*. Working Paper 2006:1. Uppsala University.
- Cheung, A. K. L., & Yeung, W. J. J. (2015). Temporal-Spatial Pattern of One-Person Households in China, 192-2005. *Demographic Research*, 32(44), 1209-1238.
- European Youth Portal. (2019).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s://europa.eu/youth/fr/article/118/18213_en.
- European Commission. (2019). Sweden Housing Allowance.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s://ec.europa.eu/social/main.jsp?catId=1130&intPagelId=4807&langId=en>
- Ministère des Solidarités et de la Santé. (2017). Report on the French Ageing Policy.
- Giddens, A. (1991). *Modernity and Self-Identity: Self and Society in the Late Modern Age*. Cambridge: Polity.
- GOK.UK. (2019).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s://www.gov.uk/council-housing/types-of-tenancy>
- OECD. (2011). *The Future of Families to 2030*. OECD.
- OECD. (2018). *The OECD Tax-Benefit Model For Sweden*. OECD.
- Scanlon, K. & Arrigoitia, M. F. (2015). Development of New Cohousing: Lessons from a London Scheme for the over-50s. *Urban Research and Practice* 8: 106-121.
- Statistics Bureau of Japan. (2019). *Statistical Handbook of Japan 2019*.
- UN. (2017). *Household Size and Composition Around the World 2017*.
- Vestbo, D. U., & Horelli, L. (2012). Design for Gender Equality - the History of Cohousing Ideas and Realities. in *Built Environment*, 38(3), 315-335.
- Vestbro, D. U. (2014). *Cohousing in Sweden: History and Present Situation*. Retrieved November 1, 2019, from <http://www.kollektivhus.nu/pdf/SwedishCohousing14.pdf>